

6 코로나19 특별기획③ 교육

합리성과 공적 이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이 추구할 가치



성 열 관
교육대학원 교수

◆ 모든 세계가 동시에 같은 문제를 겪는 일은 흔할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흔하지 않은 현실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았다. 전 세계는 혼돈에 빠졌으며 국경은 폐쇄되고, 가게는 닫혔으며 가족과 친구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 희망의 서광을 비추고 있다. 우리가 다시 노멀로,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뉴노멀로 돌아가기 전에 이번 COVID19 팬데믹이 우리에게 던져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니 계속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재난의 사태는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할지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다.

먼저 이 사태는 모든 세계가 동시에 겪는 같은 문제로서 글로벌 연대감에 대한 교육을 보다 더 요구할 것이다. 또 각 국가에서는 평상시라면 주저했거나 위협을 감수하지 않았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 실험'(가상 실험이 아니라)은 집단지성과 속의 능력 신장의 중요성을 환기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언제든지 역경과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위협을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교육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들은 스스로 삶을 개척하면서 사회적 이슈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성과 공적 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이러한 교육의 책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고 생각하며, 적어도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교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첫째, 이번 재난 사태에서 우리는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이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잘 가르쳐주어야 한다. 작년 전반기

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될 때 각 국가들이 맨 처음 한 일은 국경을 폐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시민들이 국경을 넘어 얼마나 긴밀한 상호의존적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한편 이 사태는 혐오와 갈등을 낳았으며, 숨죽이고 있었던 인종주의와 극우 민족주의까지 표면에 드러나게 했다. 이러한 현상이 극에 달한 상징적 사건이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실로 충격적이었으며, 이 충격에서 우리는 인종주의 정치가 얼마나 쉽게 부활할 수 있고 동시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종종 민족주의와 독재정치가 결합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고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COVID19는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국가들은 서로 경쟁하며 자국의 보호를 위해 타국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그러나 COVID19는 일국의 노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백신의 개발과 접종은 글로벌 연대와 협력의 기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우리는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글로벌 연대감은 국경의 봉쇄를 통해 많은 국가에서 확산을 완화했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자개발 국가에 식량을 원조했다. 또한 전 세계 과학계가 서로 협력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다. 한편 일선 학교는 글로벌 연대감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준비가 아직은 미약해 보인다.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한다 할지라도 이 사태가 준 글로벌 연대감이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COVID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집단적 속의를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요구는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속의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한국은 그나마 팬데믹에 잘 대처하였다고는 하나, 이 재난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기가 침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연대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글로벌 연대감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고
있다.

”

되어 자영업자는 물론 많은 노동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충격은 고스란히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교육의 질, 정서적 만족감, 영양과 건강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가계소득의 감소분을 일부라도 보전해주고 안전망 아래로 빠져버리는 시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시민들은 그 지원금을 얼마 정도로 정해야 하는가? 누가 부담할 것인가? 누가 먼저 받을 것인가 등 다양한 논의에 참여해 왔다. 더욱이 이 재난 사태 이전에도 있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한 기본소득 논의가 전면에 부상한 것도 어쩌면 이 사태의 부수적 효과일 수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배정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소득 또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아이디어는 매우 창의적인 것이며, 그렇기에 집단적 토론을 거쳐야 하는 과제이다. 과연 이 아이디어가 COVID19가 가져온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 결과가 될지도 관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재난이 자라나는 후속 세대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집단적 속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교훈

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셋째, COVID19는 많은 이들에게 역경과 실의를 안겨주었고 위험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의 회복탄력성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상당히 예외적이었으나 국제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가까운 가족을 잃기도 하고, 자신이 확진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재난의 일상화와 불안정성이 더 가속된다고 할 때 시민들에 꼭 필요한 능력이 회복탄력성일 것이다. 이것은 개인들이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바탕으로 위험에 대응하고,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여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갖추기 어렵다. 위험에 처한 개인들이 사회적 자원을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상호의존적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을 존중하는 협력체제가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며, 민주주의에 참여를 경험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지닌 사람들은 재난이 자라나는 후속 세대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집단적 속의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여, 회복탄

력성을 가진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업인지 깨닫게 해준다. 넷째, COVID19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만들어 냈으며, 교육에서 윤리적 추론 능력의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준다. 오늘날 이러한 딜레마는 실혐상황이 아니라 실제상황 속에서 던져졌다. 보통 많은 윤리학자들은 실험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이용한다.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의 트롤리 딜레마나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의 하인츠 딜레마 등이 그것이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의 책임(마스크 착용, 집합금지 등)은 어디까지인가, 의료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누가 먼저 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자격이 있는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프라이버시나 의무사항을 어느 정도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누가 먼저 백신을 맞을 것인가? 등 많은 윤리적 딜레마를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했다. 그 와중에 공공의료 확대 차원에서 정부가 제안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대한의사회 등의 의사들의 반발을 낳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지루한 갈등과 대결을 한 차

레 겪었다. 일단 팬데믹 상황에서 이 논의는 어느 정도 유예하자는 식으로 봉합되었으나 여전히 다시 한번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는 이 갈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윤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적인 힘과 교양이 충분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꼭 그렇지 않다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합리적 토론 능력과 공적 이성을 길러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미래 시민인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윤리적 추론 능력과 공적 이성에 대한 교육이 실로 더 중요해졌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글로벌 사회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한 실존적 개인으로서, 합리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이 사태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이러한 균형적 시민을 길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 이 전대미문의 사태가 한동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는 사태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러한 현실은 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대한의사회 등의 의사들의 반발을 낳았고, 우리 사회 전

원격 수업 사각지대 장애학생·유학생

허지영 기자 jy000224@khu.ac.kr

비대면 학사 운영으로 학습에 차질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들이 비대면 수업에 장벽이 아닌 일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꾸준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19 시대,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온라인 수업 영상 강의 플랫폼으로는 입 모양이 보이지 않아 청각장애 학생들이 강의를 이해할 수 없고 학교의 학습 지원마저 끊겼다고 토로했다. 우리신문도 장애학생이 비대면 강의 수강에 겪는 어려움을 보도한 적 있다.(1663호, 2020.9.21, 장애학생 학습권 개선 ‘지지부진’, 본부도 지원 여의치 않아) 장애학생뿐 아니라 유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도 온라인 수업 인프라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유학생의 경우 소통이 더욱 어려워졌다. 외국인지원팀 위세호 과장은 “교수자와 유학생 학습자간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최근에도 한국어 능력이 크게 요구되는 수업에서 유학생과 교수자 간 소통 문제가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다. 콜버그의 하인츠 딜레마는 아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돈이 부족한 남편 하인츠가 신약을 독점한 약국에서 약을 훔쳐다 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윤리적 판정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된다. 그런데 학생들의 윤리 수준을 평정할 때 하인츠가 약을 훔쳐든지, 안 훔쳐든지는 중요하지 않다. 학생들이 제시하는 정당성이 단지 준법정신을 넘어 얼마나 인권이나 보편 윤리에 근거하는지가 중요하다. 감염병의 창궐과 같은 COVID19 재난은 하인츠 딜레마와 같이 가상적 상황이나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로 우리 앞지 또 발생할 수 있는 사태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러한 현실은 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대한의사회 등의 의사들의 반발을 낳았고, 우리 사회 전

전에 강의 자료를 받아야 제대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매년 교수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요청해야 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역시 해당 단과대 행정실을 통해 교수에게 요청해야 했기에 시간이 소요됐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조교로 등록된 도우미들이 강의 자료를 학습 기간 이전에 열람할 수 있어 장애학생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폐업 비율이 증가하면서 학습에만 매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다. 가계 상황이 어려워져 등록금을 벌어야 하는 학생부터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진 학생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우리 학교는 지난 학기부터 경희후배 사랑캠페인을 통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모금액은 가계곤란 학생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습 취약 학생들을 위해 타 대학에서는 활발한 논의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배재대는 한국인 재학생 16명을 모집해 유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언어 및 문화 교류 활동을 기획했다.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최우수 평가를 받은 서강대는 장애 학생에게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강의대필, 학습지원, 교내이동 등을 포함한다. 장애 유형에 맞춰 세부 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해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소통이 어려우니 학습 부진 문제도 따랐다. 익명을 요청한 A 씨는 “문제가 있어도 제때 교수님께 연락하여 질문할 수 없고 다른 학우와도 빨리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업 모니터링 및 학사 부처응자에 대한 온라인 상담 외에 비대면 시대에 맞는 구체적 학습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한편 지난 2월 1일 교육부는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신청을 안내했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지속됐지만 교육부는 올해 원격수업에 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지원인력 열람하고 장애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학생은 수업